

## 희생자 가족 품으로... 곳곳 장례식 '눈물 바다'

제주항공 희생자 영결식 잇따라  
광주시·전남도 화장시설 지원  
경찰, 원인 규명 강제 수사 돌입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국금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일째를 맞은 2일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오전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첫 발인이 유가족과 지역민의 애도 속에 진행됐고 나머지 유족도 영결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사고 규명에 나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무안공항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제주항공 관련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출국 금지조치했다.

전남도는 2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총 30명의 참사 희생자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당국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시신을 별도의 수습조치를 하지 않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인도하고 있다.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들은 광주시 동구, 서구 등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희생자가 가족 단위 여행객인 경우가 많았던만큼, 가족 중 일부의 시신만 인도받은 유족들은 장례를 미뤄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전남을 통틀어 4명의 희생자에 대한 발인식이 각각 진행됐다. 3일에는 6명, 4일에는 5명의 희생자가 차례로 가족들과 영결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장례시설을 확보(광주 23곳, 전남 123곳)하고 장례 절차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장례식장을 최대한 확보해 유족이 희망하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영결하도록 돕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화장장 운영시간도 연장한다. 광주 화장시설인 화락공원은 화장장 운영 시간을 오전 8시~오후 4시에서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영락공원 추모관에는 유족들을 위해 별도 안전실도 마련했다.

순천시는 유족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순천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희생자 유류품 분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유가족에게 인계되기 시작했다.

군 공수부대원들과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은 현장에서 미수거된 유류품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대원들은 흙과 마른 잡초를 일일이 헤집으며 유품을 찾고 있다.

경찰은 사고 관련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2일 오전 9시부터 무안공



2일 군부대원이 제주항공 참사 현장 주변에서 희생자 유류품을 찾기 위해 추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원들이 작업현장 뒤편 둔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엔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기체 일부를 수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고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직 정식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으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제주항공 관련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국 금지조치했다.

경찰은 항공기 운행 정비 뿐 아니라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명 ‘로컬라이저’ 설치 등을 포함한 시설에 관련 기록과 서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준비 '긴장'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체포에 불응하고 있어 고심 중이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해야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헌법재판소, 오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연다

8인 체제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관련기사 6면>

전날 취임한 신임 재판관들이 재판관 평의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2차 준비기일에서 증거와 증인 채택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준비기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1월 중순부터는 본격심판 절차인 정식변론 기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본격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현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고(故)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공개변론만 각각 7회, 17회 열렸다. 준비기일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3회 진행됐다. 두 대통령은 한차례도 현재 심판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아파트 약성 미분양 쌓인다	▶8면
2025 신춘문예 동화·시 당선작	▶14·15면
전남 드래곤즈 김현석호 “K2 우승 목표”	▶18면

###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삼성은행

삼성은행은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